

보도참고자료



기획재정부
MINISTRY OF STRATEGY
AND FINANCE

보도일시	2011. 4. 23(토) 배포시		
배포일시	2011. 4. 22(금) 09:00	담당부서	재정정책국 재정정책과 예산실 예산정책과
담당과장	양충모 (2150-5310) 최상대 (2150-7130)	담당자	권재관 사무관 (2150-5311) 정 한 서기관 (2150-7131)

제목 : 2011년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개최 결과

☐ 오늘 개최된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을 별첨과 같이 첨부합니다.

첨 부 :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주요 논의내용

기획재정부 대변인

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주요 논의내용

- 정부는 4.23일 '더 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'11~'15년 재정 운용 전략'을 논의하기 위해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였음
 - 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, 김황식 국무총리 등 전 국무위원과 KDI 원장, 조세연구원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음
- 1세션에서는 「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한 '11~'15년 재정운용전략」 및 「'12년도 예산편성 방향」을 논의함

< 주요 논의내용 >

- 우리나라는 금융위기 극복 이후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재정건전성 회복속도가 빠르고 양호한 모습이나,
 - 잠재성장률 저하, 저출산·고령화, 통일대비 등 각종 중장기 위험요인이 상존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, 특히, 내년도 선거일정 감안시 무상복지 등 재정 포퓰리즘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함
- 또한, 우리나라가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양호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고, 영·미 등 주요국도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화를 위한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,

- '11~'15년 재정운용은 각종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재정건전성 기반을 마련하고,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대응전략을 강구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함
- 아울러, 재정건전화 노력과 함께 성장잠재력 분야에 대한 투자 확충 노력이 조화롭게 추진되어야 하며,
 - 복지, 교육, R&D 등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온 분야에 있어서도, 기존의 관행적·시혜적 지원에서 벗어나 집행 효율성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,
 - 유사·중복사업은 과감히 축소·폐지하고 지원방식을 개선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
- 이와함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지출효율화 및 세입기반 확충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실천전략이 논의됨
 - 우선, '10~'14재정운용계획에서 도입한 재정준칙을 준수하여,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~3%p 낮게 유지하고, 의무지출은 PAYGO 원칙을 통해 무분별한 지출증가를 억제
 - 그간 부처별로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사업(농공단지 조성 등), 콘텐츠가 부족하여 활용도가 낮은 낭비적 국고보조 사업(지역 체육·문화시설 등)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
 - 미흡 사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, 신규사업은 철저한 사전 타당성 검토·관리

- 특히, 내년도 정치일정과 맞물려 포퓰리즘적 재정수반 입법(복지, 조세감면 등)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므로, 국회에서 재정에 과다한 부담을 주는 입법추진 사례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

* 4.22일 현재 18대 국회 의원발의 법률안(총 9,486건) 중 재정수반 법률은 2,780건(29.3%)이며 '11~'14년 소요비용 추계는 800조원 수준

- 아울러, 탈루소득 과세, 불합리한 비과세·감면 정비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병행

□ 이러한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에 대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한 민간 전문가 발언 요지는 아래와 같음

【현오석 KDI 원장】

- 세계경제 불확실성 등에 따른 하방 리스크, 잠재성장을 하락 추세, 복지 포퓰리즘 확산 등 감안시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 및 재정규율 확립을 통한 정부의 신뢰성 확보 필요

【원윤희 조세연 원장】

- 세원확대를 통한 세입확충방안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탈루 소득 과세 강화, 조세감면제도 존치평가 도입 등을 통한 비과세·감면 축소, 술·담배·에너지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 등 제시

□ 2세션에서는 복지, 경제·일자리 등 주요 분야별 투자방향과 쟁점에 대해 논의하였음

< 주요 논의내용 >

□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방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지출요인 억제 및 수입 확충방안을 중점 논의

- OECD국가의 2배 수준에 달하는 약제비 지출 절감, 과잉진료 억제 등 지출효율화가 필요하고, 적정 보험요율 인상 등 수입 확충의 필요성 공감
- 기초생활보장 탈수급 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탈수급 유인책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
 -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·탈빈곤이 기본정책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,
 - 이를 위해 탈수급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교육·의료급여를 지급하는 이행급여를 계속 확대해 나가는 방안 등을 논의
- 청년일자리 사업 성과제고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층 창업·창직 활성화가 중요하며, 재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는 경기회복 상황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
 -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문화콘텐츠 분야 등에 대한 지원 확대와 아울러 여성인력 활성화 방안 등도 논의
- 오늘 논의된 주요내용은 '11~'15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'12년도 예산안 편성시 반영할 계획임